

건설산업 상생 협력 - 가시적 성과 사례 다양해

- ‘相生 스트레스’ 벗어나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

한 형 용 | 건설경제 정경팀 기자

“대 ·중소 기업 상생 협력에서 정부 역할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고(故) 노무현 前대통령

“대기업 문화와 중소기업 문화를 바꾸어야 하고, 기업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경제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

과거 고 노무현 前대통령 시절부터 논의돼 온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화두는 2010년 현재도 ‘뜨거운 감자’다. 수년간 대기업 중심의 일회성 또는 한시적인 상생 협력이 이뤄졌다는 스스로의 자책이자, 기업 생존 전략에 필수 사항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중 건설산업의 상생 협력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갑, 을 관계의 인식 전환 및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시공 능력 향상이라는 성과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산업 분야의 그룹 총수까지 협력업체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애로 사항을 점검하며 협력사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공동 특허 출원 및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의 낮은 설계 단가에

따른 대·중소 기업 간 비용 갈등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상생 협력’ 눈길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정규 등록사(협력사) 수는 평균 400개 이상이다. 롯데건설은 정규 등록사만 904개에 달하며, GS건설은 742개, 대성산업과 이수건설도 각각 747개, 664개에 이른다. 평균에 속하는 삼호와 두산건설, 극동건설, 쌍용건설, 월드건설, 한일건설, SK건설 등은 각각 543개, 456개, 445개, 446개, 400개, 397개, 357개로 나타났다. 삼성엔지니어링과 두산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등은 각각 219개, 235개, 290개로 정규 등록사의 소수 정예화를 통한 협력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들 협력사를 대상으로 2000년 초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두 계약 금지 등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준수하는데 이어 공동 기술 개발과 자금 지원, 기업 경영 교육 등 새로운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집

'건설업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포스코건설은 동영산업과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실외기실문의 기능을 보유한 대피 공간 도어'를 개발, 주거 문화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방화와 단열, 결로, 차음, 차연 등 기능 강화한 실외기실문은 동영산업의 기술 분석과 양산 시스템 개발, 포스코건설의 제조 확인 답사 및 성능 평가와 보완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의 협력으로 완성됐다. (주)인스텝과는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서 중요한 폭렬 현상과 강도를 견비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원가 절감과 초고층 건축물 건설 기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서울엔지니어링과는 수입에 의존하던 고로 핵심 부품인 동스테이브 국산화에 성공했다.

코오롱건설은 동천건설과 함께 '2열 H-PILE'을 활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을 개발해 경기도 수원 신매탄 주공아파트 현장 등 5곳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신공영은 1997년 자재 값 폭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백아건설의 자금난을 해결해주면서 14년째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GS건설은 2006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내장목 공사 전문업체인 도원건설과 무려 1,429가구 수의 계약을 체결, '품질 경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 있도록 했으며 '자이Xi CEO포럼'을 통해 협력사 CEO와 멘토링도 병행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한 거가대교 침매터널 시공 과정에서 (주)성보이엔씨와 협력을 통해 '피복석 투하 버켓' 기술을 공동 개발, 정밀 시공과 품질 향상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봤다.

대림산업은 D&P(Design & Procurement)제도를 통해 조정식재 전문건설사인 청우개발에 용인마북과 청담3차, 판교택지지구, 광주오포2차, 보라매 e-편한세상, 용산신계, 교보사옥 등의 관련 공사를

지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창유리 가공 제조 및 시공을 맡아온 국영지앤엠 뒤에는 한화건설이 있었으며, 판교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과 파주 운정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등 시공 성과를 가진 광장EMC에겐 태영건설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졌다.

이 밖에 롯데건설의 경영닥터제, 한화건설의 특허 공동 소유, 대보건설의 무기명 설문조사 시스템, 태영건설의 저가 심의위원회, 극동건설의 하도급 100% 현금 지급 등 제도와 건설사의 상생 협의체(성건회, 두우회, 용건회, 보람회, 웅건회 등) 운영을 통한 경영·교육 지원 등은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도 강화

정부의 지원 대책도 강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 8월 '건설분야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 건설산업 상생 협력 정책 방향의 기본 지침을 제시했다. 기본 지침에는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확대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덤핑 낙찰 방지, 전기·정보통신 공사 하도급제도 개선, SOC 민자사업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는 이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건설 현장에서 시행 중인 제도지만, 발주자가 법인 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와 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등은 그동안 지방 건설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

최해 업계 애로 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월 초 대기업이 원재료의 기준 단가를 조정할 때 2차 이하 협력사도 같은 조건으로 납품 단가를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2007년 도입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결’은 지난 9월 현재 142개 대기업이 5만 7,384개 협력사와 협약을 맺는 성과를 낳았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는 지역 내 시공 능력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 데 이어 ‘엔지니어링회사와 건설자재 제조사의 만남의 날’, ‘건설 자재와 설계의 만남의 날’ 등을 잇달아 마련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지난 8월 이러한 상생 협력 분위기를 반영해 시공능력평가 금액 순위 상위 20위권의 대형 건설사 외주 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개최, 재입찰 및 협상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어음 할인료 및 지연 이자 미지급, 대물 변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양하겠다는 실천 방안을 선언했다.

가격 패러다임 전환 등 필요

하지만 건설산업의 상생 협력이 시스템으로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빠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일시적 또는 전시성 계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공공공사 계약제도에서의 ‘상생 협력’은 사실상 어렵다. 핵심에는 건설산업의 가격 중심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다. 발주자는 최저 가격을

원하고, 일반건설사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받고, 협력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공사를 수행해 이익을 남겨야만 하는 산업 구조적 문제다.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협력사가 있다 해도 낙찰 가격 등을 고려하다 보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협력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가격 패러다임은 일반건설사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이 공사 수주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상생 협력을 추진하려는 일반건설사 내부에서는 이른바 ‘상생 스트레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결국 일반건설사와 협력사 간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기업 문화 인식 개선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단순 하청업체로 인식한 상황에서의 상생 협력은 단순한 자금 지원 등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목표는 100% 현금 결제 등이 아닌 처지에 맞는 지원과 마음가짐에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 간 출혈 경쟁 방지부터 협력사 및 건설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상생협업체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강화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설은 오케스트라다. 원사업자와 협력사, 발주처 등 수많은 건설 주체가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 